



[최저임금의 역습] 사용자도 노조도 승복 못하는 최저임금 사회갈등 뇌관으로 03



Economy

코스피	2082.48 (-4.18)	코스닥	674.79 (-6.38)
금리 (미국 3년)	1.43 (+0.01)	환율 (원/달러)	1179.30 (+0.01) (10일)

하루 하루가 살얼음판... 6대 그룹 “비상경영”

삼성·SK·LG

日 수출규제에 대응책 마련 분주

롯데

한일 냉기류에 불매운동까지 휘청

현대차

10조 투자 GBC, 규제에 건립 난항

포스코

환경오염 여론 악화에 전전긍긍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본격화로 삼성·현대차·SK 등 국내 경제를 이끌고 대기업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이 같은 대내외 규제에 국내 산업계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삼성과 SK, LG는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며, 롯데도 한일관계 냉기류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10조원을 투자해 글로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 C)의 용지 매입했지만 규제에 막혀 사업장 착공도 못하고 있다. 포스코는 철강오염물질 배출 이슈를 마무리 짓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그

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포스코그룹 등은 사실상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가 '발등의 불'이 되면서 누구보다도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옛새간의 일본 출장을 마치고 지난 12일 귀국한 이 부회장은 당분간 경영진으로부터 매일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는 동시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 하반기 경영 전략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귀국 다음날인 13일에도 디바이스솔루션(DS) 및 디스플레이 부문 최고 경영진을 소집해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갖고 출장 결과를 공유하면서 소재 수급 현황, 사업 영향,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정희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판매 부진 만회를 위한 돌파구 모색과 신사옥 GBC 착공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최악의 부진을 겪은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신차 출시로 라인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GBC 개발 사업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용지에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신사옥을 짓는 사업이다. GBC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돼 있는 계열사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현대차 화성연구소 찾은 이스라엘 대통령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정희선 수석부회장이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넥소 절개차를 설명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용지 매입 후 2016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문턱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최근 주력사 가운데 하나인 SK하이닉스가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열흘 가까이 일본에 머물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나선다. 신 회장은 이달 16일부터 시작되는 사장단 회의(VCM)를 주재한다. 겹겹이 악재가 쌓인 데다 불매운동 여파까지 맞으면서 휘청대는

롯데그룹의 생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신 회장이 어린 시절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친분이 있었을 정도로 국내 재계의 대표 '일본 톱'으로 불린 만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 외교관'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日 수출규제’ WTO서 논의... 실효성은 물음표

‘日 경제 회복’ 국제적 공론화 근본적 해결 방안되기 어려워 정부 외교적 대화부터 나서야

일본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상정된다. 정부는 불합리한 무역 보복을 공론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WTO는 오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식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일반 이사회는 WTO에서 각료회의를 제외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한국 정부가 최근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제기한 요청으로 안건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부당성을 설명하고, 국제사회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는 WTO 제재가 최선이나는 데 있다. 사태 원인이 한일간 외교적 분쟁에 있음에도, 국제기구에서 논의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첫 실무회의에 참석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왼쪽)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3일 하네다공항을 떠나기에 앞서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와 나눈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표한 설문조사에서 'WTO제소'를 대응책으로 꼽은 일본 전문가 10%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이인 48%는 외교적 대화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전경련 정봉호 국제협력팀장은 "일본 수출 규제는 강제 징용 배상 문제로 불거진 외교 문제"라며 "WTO에서 일본을 제재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무역 분쟁 소지를 남겨둔다는 점에서 WTO 제소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정면 회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

다. 일본과 대화가 중요한 시점에서 외교력 강화보다는 내부 단속에만 관심을 보인다는 비판이다.

청와대가 최근 재계 간담회를 열고서도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데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SNS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허락없이 먼저 배포하면서도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간 과장급 실무회의를 열고도 수출 규제 해결에 미온적이었다는 의혹도 이어졌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한 숨 돌린 철강업계 고로 가동유지 ‘청신호’

현대제철 조업정지 ‘집행정지’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도 기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현대제철에 대해 열흘 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충청남도의 행정 집행을 중단시킨 가운데 비슷한 사정의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역시 고로 가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현대제철이 충청남도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열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대제철은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조업정지를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행정심판 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앞서 충남지사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고로의 블리더 밸브(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에 열흘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중앙행정심위는 추후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양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진술 등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중앙행정심위가 이번 결정으로 10일 조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청문절차를 진행 중인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의 고로 계속 가동여부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앞서 포스코는 블리더가 고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필수시설이라며 지자체에 청문절차를 요청했다. 한편 전남도는 청문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렀으며 경북도의 경우 청문절차에 앞서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의 판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충남도와 같은 처분이 내려져 행정심판에 들어갈 경우 같은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